

이슈 해설

서남대 의대 폐과 결정

대학 구성원들 '분노'... 교육부 '방긋'

교수평의회 등, 구 재단 재산권 행사와 순천대 의대 신설 정치권 요구 맞아떨어진 결과 의혹 제기

서남대 구 재단 측의 일방적인 의대 폐과 결정에 서남대교수평의회 등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구 재단 측 재산권 행사와 순천대학교 의대 신설이라는 정치권의 요구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교수평의회 등 크게 당혹

구 재단 측이 한려대학교 매각대금과 서남대 의대 폐과로 자금을 마련해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수자들이 나설 수 없게끔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서남대 교수평의회 관계자는 "서남대의 경우 의과대학은 대학 구성원들이 고등분담을 통해서 살리려고 애쓰고 있다. 의과대학을 폐과하면 사실상 폐과 상태가 된다"면서 "이번 정상화 방안은 기본재산권을 매각해 재산을 지키려는 구 재단 측과 서남대 폐과에 이은 순천대학교 의대 신설에 힘을 실어주려는 교육부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서남대 한 관계자는 "의대 폐과가 쉽지 않지만 가능성이 전혀 없어보이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우 의과대학 정원은 다른 지역이 아닌 전북지역에서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 재단 측이 기업체나 대학 등 다른 곳에서 서남대를 인수해 정상화를 시키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방해공작으로 볼 수 있다"면서 "서남대가 다른 곳에서 인수가 될 것 같으니까 교육부에 이러한 정상화보고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 다른 곳에서도 접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몇 군데에서 연락이 오고 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 발표는 어렵다"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교육부의 이중행동도 도마 위에 올랐다. 서남대 측은 "구 재단에서 폐과를 하겠다. 하지 않겠다 하는 관한 자체가 없

다. 범법행위로 인해 교육부로부터 임원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면서 "그런데 교육부가 임원이 취소된 이사진들이 한 제안을 받아들인 행동에 대해서는 항의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폐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폐과 가능성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실대학 지정 당시 서남대를 퇴출하려 했지만 의대 존치 여론이 확산되면서 지역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주자는 안을 검토한 바 있다"면서 "하지만 이 안은 근시안적인 대책이라는 말 때문에 흐지부지 끝난 적 있다"고 회상했다.

▲교육부 부실 대학 폐과 '신호탄'

대학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는 '순 안대고 코를 킂' 모양새다. 구 재단 측 정상화 방안이 통과될 경우 교육부가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 온 대학구조조정 평가 이후 자진 폐과되는 첫 사례로 부실대학 폐과 신호탄으로

사용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하위등급에 있는 대학에 자극제가 될 것"이라면서 "여건이 어려운 대학 간 통폐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상화 방안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강도 높은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남대에서는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고 있다. 서남대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 방침인 대학 구조조정에 있어서 그동안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교육부가 갑자기 보도 자료를 내는 것부터가 적절치 못하다"면서 "서남대의 경우 정상화를 위해 교육부가 주관해오던 컨설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러한 보도 자료를 낸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한 의구심을 나타냈다. /고민형 기자

임정엽, 국민의당 정책위 부의장 선임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으로 선임됐다. 국민의당은 7일 당헌에 따라 당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위원회 부의장 9인과 정책 조정위원회 부위원장 17명을 선임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선임된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경제, 산업, 노동, 방송, 금융, 문화, 인권 등 주요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 정책위원회와 정책조정위원회에 소속돼 당 정책의 연구, 심의, 개발 및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인선을 총괄한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다른 정당에 비해 전문위원 규모가 작고 누적된 정책 자료가 부족한 신생 정당의 환경을 고려했다"며 "각 계에서 추천된 인사들 중 실질적인 정책개발 능력이 검증된 분을 엄선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정동영, 서울메트로·철도공단 상시청문회 제안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서울메트로와 철도시설공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상시청문회 통해 국민의 고통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7일 정동영 의원은 국민의당 의원총회에서 "구의역 19살 김 모군 사망 사건과 남양주시 진접선 공사현장 사망 사건의 공통점은 의주화"라며 "이는 일명 '헬조선'으로 규정되는 우리사회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시청문회 추진을 제안했다.



정동영 의원은 "공기업(서울메트로, 철도시설공단)마저 시설공관리, 안전관리 등 핵심부문을 저비용 하청구조에 떠넘기는 것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사회경제적으로 불평등 구조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19대국회가 입법한 상시청문회에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지하철 참사 청문회' 등을 통해 상시청문회가 국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이번 제안에 대해 참석 의원들은 관련 상시청문회를 개원 이후 추진할 것에 동의했다. /신광영 기자

도의회 더민주, 10일 원내대표 선전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오는 10일 원내대표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7일 의원총회를 열고 "그동안 관례였던 의장단 선거 일주일 전에 선임한 원내대표를 보다 빨리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은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요구가 강하게 맞붙게 되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국민의당 의원들은 당초 알려진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각각 1석과 달리,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지난 8대 도의회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이 나눠줄 때 민주당에게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각 1석씩을 내준 적이 있었다. 그때는 열린우리당이 22명, 민주당이 12명으로 과반수를 넘었지만 지금은 1/3로서 다르다.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2석은 무리다"고 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당 의원들과 협상을 위해서는 원내대표 우선 선임이 필요하다는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정리가 안된다면 투표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

새누리 도당, 한은 화폐수급 재개 촉구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전북의 금융산업 특화도시 조성을 위한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업무 재개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7일 성명서를 통해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지난 2012년 지방조직 경영 합리화라는 이유로 화폐수급 업무를 중단하고 광주전남본부에 관련 업무를 이관했다"면서 "이로 인해 전북의 금융기관은 매년 2조원이 넘는 현금을 멀리 광주전남 본부와 대전충남 본부까지 운송하며 막대한 추가 비용 지불과 도난 사고 우려, 화폐의 적기 미공급으로 인한 지역경제 발전의 어려움 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한국은행 인천본부와 강원본부에 대한 화폐수급 업무는 개시됐지만 전북본부가 배제된 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서라도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도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전북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이전에 따른 금융특화도시 조성 등 한국은행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화폐수급 업무 재개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했다. /신광영 기자

전주시, 1회 추경(안) 시의회 제출 본예산 대비 1216억원(9.07%) ↑

전주시는 시장 핵심사업과 시민안전, 불편해소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 1조 4619억원 규모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 심의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심의를 요청한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8.54%(979억원) 증가한 1조244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2.26%(237억원) 증가한 2171억원 규모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세 삭감(△212억원)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시비부담액, 버스·택시 재정보조금 등 법외무경비 및 장애인·노인 생활시설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 서민생활 안정지원을 비롯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 등을 추가 반영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조2448억원으로 도시계획시설 토지매각 대금 등 세외수입 51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161억원, 시·군 조경교부금 2억6000만원, 순세계 잉여금 662억원, 전입금 125억원 등을 계상해 당초예산 1조1469억원 대비 979억원(8.54%)이 증가했다.

9개의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12억원 및 순세계잉여금 50억원 증가분, 국·도비 보조금 변동사항(9억원 감소)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한 총 2,171억원으로 당초예산 1,934억원 대비 12.26%인 237억원이 증가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 주요 반영사업을 살펴보면, U·20월드컵 대비 시설 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SOC사업 마무리 지원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예산이 책정됐다.

또한 시는 청소·교통분야 지원예산도 편성했다. 편성된 주요예산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20억원 △전주주요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1억1900만원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150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4억9000만원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6억8000만원 △전통한옥 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1억7000만원 △무류 경로식당 지원 1억7000만원 등 문화·관광분야 예산과 저소득층 복지분야 예산도 편성했다.

재난·안전분야 주요 예산은 △상습 결빙구간 열선설치 8억원 △송천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6억5000만원 △독배천 지방하천환경 정비 14억6000만원 등이다.

이밖에 시는 △한소산업 육성 지원 5억원 △신성장 산업 육성 지원 7억4000만원, △청년활동 지원 6000만원 △전통시장 육성 4억7000만원 △승안 새마을을 조성사업 6억6000만원 등 인력양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사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8일부터 17일간 진행되는 전주시의회 제331회 제1차 정례회 심의를 거쳐 오는 24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영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민주·정의당, 세월호법개정안 발의 조사기한 연장·선체조사 권한 명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전원은 7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기한 연장 및 선체조사 권한을 명시하는 내용을 담은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의원 등 더민주 의원 122명과 정의당 의원 6명 등 128명은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했다. 개정안은 세월호특별조위의 활동기간을 '기재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은 날(8월7일)'부터 기산하도록 했고 정밀조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체가 인양돼 육상에 거처된 때로부터 1년간 조사기간을 연장

하도록 했다. 또 특조위의 업무 가운데 '인양 과정에 대한 감독 및 인양된 선체에 대한 정밀조사' 사항을 규정해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는 세월호법의 시행 일인 2015년 1월1일부터 특조위가 활동했다고 보고 법이 정한 1년 6개월 후인 오는 6월30일까지만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예산이 배정되고 위원회가 조사를 갖춰 활동한 것은 8월7일이야 가능했기 때문에 정밀호의 해석은 무모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특조

위를 조기에 철수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또 다시 개정안을 내어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당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법안에 공동발의 기자회견을 같이 안한 것 뿐 개정법 통해 세월호 참사 진상을 제대로 밝히는 데 있어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개정안은 특조위 시한연장은 물론 선체인양 후 정밀조사에 대한 특조위의 면밀한 권한을 못 박고 있다. 후 대책도 더 구체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성주 기자

도·시·군 의회 의원들, 의장·상임위원장에 목매

의전 등 명예와 차기 선거에 도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

도내 각 시군 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자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특히 10대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원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는 가운데 의장 등 주요 자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한방씩 돌아가면서 맡는게 관례였지만 이번에는 지난 4.13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선진, 국민의당 당직을 가진 의원들의 한치 양보 없는 접점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원구성에 목을 매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쉽게 설명하면 명예와 향후 행보에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예컨대 도의회의 경우 전용차량과 함께 수행비까지 제공받는다. 이와 함께 많은 대내외적으로 여는 자치단체장보다 높은 수준의 의전을 받기도 한다. 의정활동 역시 각 상임위원회가 올린 안건이 상정되지 못했을 때 직권 상정이라는 막강한 권한도 부여 받는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세수 이외에 별도 업무 추진비를 받는다. 상임위원장의 경우는 소관 위원회 조례안 통과 여부를 결정지을 수도 있다. 이처럼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는다.

이번 10대 의회에서 의장단과 상임위가 눈길을 끄는 요인은 차기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기가 2년인지라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일종의 '감투'로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도의회의 경우 10대 하반기 6개 상임위원장에서 거론되는 의원들 모두가 초선의원들로 파악됐다. 이러한 해석이 맞다면 이들의 재선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정가 한 관계자는 "전반기 때 재선 이상 의원들이 상임위원직을 모두 거취기 때문에 이번에는 초선들 몫이 된 것이지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지방선거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전했다. /신광영 기자